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바젤 III 은행권 자본규제 강화, 영향은 제한적

-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7개 회원국의 감독기관들이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발표함.
 - 바젤 III로 명명된 금번의 자본규제는 미래 손실에 대비하여 은행이 보유해야 할 최소자본비율을 현재보다 약 3배 수준 강화한 것으로 나타남.
 - 최소보통주자본비율(core tier one capital ratio)은 현행 2%에서 4.5%로 상향되며, 미래 위기에 대비한 자본보전완충자본(conservation buffer)으로 2.5%의 보통주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함.
 - 또한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될 경우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해 0~2.5%까지 추가 자본을 부과할 수 있게 됨.
 - 따라서 평상시에는 7%의 최소보통주자본비율이 요구되며 신용팽창기에는 9.5%가 요구될 전망이다.
- 바젤 III의 규제강화가 향후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.
 - 이코노미스트들은 바젤 III가 예상 수준에서 합의되었으며, 유예기간이 충분하고, 대부분의 대형은행들이 이미 바젤 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향후 대규모 자본조달의 필요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.
 - 시장은 바젤 III 규제강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최소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임.
- 한편,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자본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적절한 평가, 투자자의 배당요구 자제, 은행 전체에 대한 감독 강화가 요구됨.
 - 파이낸셜타임즈는 자본비율의 분모인 위험가중자산 중 신종자본증권, 파생상품, 환매조건부채권 등을 계상함에 있어 일률적인 잣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 - 자본비율을 하락시키는 배당은 은행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배당요구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.
 - 특정 은행에 국한된 감독은 자본조달측면에서 볼 때 다른 은행의 자본비율 악화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감독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함.

(BIS 9/12, Financial Times 9/13)